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11년도 제8차 회의

1. 일 자 2011년 3월 24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준 일 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13호 — 2010년도 연차보고서(안)>

(1) 2010년 3월 10일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제13호 - 「2010년도 연차보고서(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위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2010년도 연차보고서(안)」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거둔 성과와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노력을 기술하고 독자 친화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술되었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경제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둔 내용을 충실히 기술한 점, 둘째, 한국은행이 중장기적 물가안정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한 내용을 강조한 점, 셋째, 「미국의 고용회복 부진 배경」 등 주요 관심 사항을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그래프와 표 등을 작성하여 시각적 효과를 제고한 점 등임

한편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한 보고서(안)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2010년중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이 충실히 설명되도록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물가안정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유지하였음을 부각한 점,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과 함께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점, 하반기중의 금리 인상이 통화정책기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임을 기술한 점 등임

둘째, 보고서 내용 및 표현의 명확성과 논리성을 제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정책기조 전환 및 북아프리카·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최근의 해외여건 변화를 향후 성장경로 설명에 반영한 점,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M1증가율 수출 등의 변동요인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점,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간 괴리 요인’ 설명시 공급충격의 2차 효과를 추가한 점,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및 외화대출제도의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임

## (2)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0년도 연차보고서(심의위원회안)(생략)

## 〈의안 제14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1년 3월)(안)〉

(1) 2011년 3월 10일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제14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1년 3월)(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위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음

첫째,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세계경제에 대한 내용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둘째,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항 및 이슈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참고(box) 내용을 한층 보강하였음. 셋째, 금융·경제동향 부문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내용과 인플레이션 압력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설명하였음. 넷째, 통화신용정책 운영 부문에서 금융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음. 셋째,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및 방향 부문에서 지난해 12월 조사국 경제전망을 토대로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였음

한편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한 보고서(안)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2010년 하반기 이후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방향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었음을 서술한 점,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종전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였던 배경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술한 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였던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 변화에 대해 시기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서술한 점,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위험요인을 추가한 점 등임

##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1년 3월)(심의위원회안)(생략)

## 〈의안 제16호 —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은행자본확충에스피브이 유한회사의 보유증권 처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1년 3월 31일 만기도래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2조 7,936억원 중 2조 6,936억원을 재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모든 위원들은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동 대출금을 가급적 조기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그중 일부 위원은 이를 위하여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바이백(buyback) 기준을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동 조치는 당행이 금융위위기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이제는 그러한 목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데다, 자본확충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신종 자본증권이 2013년 바젤Ⅲ 기준 적용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은행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후,

2013년말까지 펀드의 신종자본증권 보유액이 0이 되도록 정책금융공사가 펀드에게 신종자본증권 처분계획서 또는 투자자금 회수계획서를 징구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요구사항을 관계기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은행들이 자본비용을 계산해서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본격적인 금리정상화에 나서기에 앞서 이례적인 지원조치였던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을 전액 조기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본안의 대출조건중 대출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음

첫째, 경기의 불확실성이 많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출구전략은 현재 진행중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한국은행이 위기대응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출구전략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셋째, 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통해 국내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수준을 판단해 볼 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양호한 수준인 점, 넷째, 최근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도 양호한

상황인 점 등임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다만, 강명헌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본안의 대출 조건중 대출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주장하였음)

####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불임〉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참조)

### 〈의안 제17호 — 2011년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7호 — 「2011년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국내경기 상승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무난한 상황이나 건설업의 자금사정BSI가 하락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업종별 신용도별 자금사정 격차가 큰 점, 일본 대지진이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 특별지원한도와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track program)이 금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2/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같은 7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하여 현재 남아있는 특별지원한도 1조원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음

첫째, 경기의 불확실성이 많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출구전략은 현재 진행중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한국은행

이 위기대응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였던 총액한도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출구전략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셋째,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으나 중소기업대출 총액에서 총액한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임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의 정상화가 강도높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이 도입했던 대출정책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특별지원한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사전공시를 한다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별 한도를 축소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를 늘리는 방안, 지역본부별 한도를 대출실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기 보다는 실적이 큰 소수의 은행에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성장동력과 관련한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실물경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온렌딩 대출제도가 당행의 지역본부별 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매우 많으므로 동 제도와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3) 심의결과

####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강명헌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재 남아있는 특별지원한도 1조원을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음)

#### 의결사항

2011년 2/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7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